



문서번호 : 25-11-복지재정위-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제 목 : [공동 보도자료] 국회는 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전송일자 : 2025. 11. 17.(월)

전송매수 : 총 8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과미래,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국회는 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25.11.17.(월) 10:00, 국회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배당소득에 대해 현재 최고 45%에 달하는 종합과세 세율을 25%로 낮춰주겠다는 안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위 0.1%를 위한 부자감세가 명백하며, 이로 인한 배당 증대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조세 정의와 세수 확보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3. 이에 정의당은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과미래,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재검토하고 철회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4.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 등이 참석하여 발언했습니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수십,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 보는 부자감세”라며 “‘낙수효과’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감추는 ‘위장효과’라 불려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투세 폐지,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어지는

감세정책으로 주식시장을 조세회피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를 부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조세형평성도 국가재정 감소도 ‘나중’으로 미루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주식투자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하는 다수의 보통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고소득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의가 핵심”이라며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과세로 세수 확보하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규모가 26조원에 육박하며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들이 벼랑 끝에서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정부는 완전히 특정 계층만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청년의 학자금 부채 탕감과 자영업자 회복부터 하는 것이 진정한 조세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회는 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 주요 내용

·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은 상위 0.1% 자산가들에게 돌아간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배당 확대 효과는 미미하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라발언순서

· 사회 : 이호성 정의당 사무총장

· 공동주최단체 대표 발언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2] 발언문

[붙임1] 기자회견문

국회는 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근로소득은 45%, 주식배당은 25% 세금? 조세정의 파괴이자 불공정 부자감세다!

이재명 정부가 내란청산과 개혁을 국정과제로 이야기해놓고, 국민의 기대와 달리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상위 1%를 위한 부자감세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개월 간 배당 확대라는 명목으로 슬금슬금 말을 흘리더니, 결국 2천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기존 세율보다 20%p 낮은 2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식배당으로 한 해에 2천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평균 배당수익률 3% 기준으로 6~7억원을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2024년 기준 국내 가구 평균 자산이 5억 4022만원이다. 평범한 가구의 총 자산보다도 많은 금액을 주식시장에 몽땅 투자할 수 있는 명백한 부자들이다.

게다가 이 부자들은 이미 배당소득을 싹 쓸어가고 있다. 2023년 기준 상위 0.1%가 46%, 상위 1% 67.5%의 배당소득을 가져간다. 상위 1%는 연간 1인당 평균 배당소득 1억 1,700만원을, 상위 0.1%는 무려 79억 5천만원을 받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이 새벽노동과 심야노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금액을 이들은 주식배당으로 받아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위한 세금을 깎자고 하고 있다. 재벌 대주주를 비롯하여 수십억 원의 배당소득을 챙기는 상위 0.1%에게 막대한 선물을 주고 싶어 안달이 났다. 부인할 수 없는 노골적인 부자감세이고, 응능부담이라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일이며,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이다.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조세정의를 망가뜨리고, 공정한 사회를 약속하면서 자산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는 광장의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배당이 늘어나서 개미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 배당은 기업지배구조와 투자기회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확한 예측이 아닌 막연한 기대만으로 4600억원의 세수를 포기하고, 우리사회의 공공성과 정의의 가치를 저버리는 조세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제까지 낙수효과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재벌과 대기업,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서민에게 흘러내린 적인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보이지 않는 낙수효과가 아니라 명확하게 보이는 정부의 조세 정책과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장기 실업자 수가 4년만에 최다라고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모자라다. 당장 내년부터 지역통합돌봄이 시행된다. 우리 공동체가 투자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응능부담의 원칙과 불평등 해소라는 가치에 따라 세금을 걷어서 필요한 곳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둘째, 금융자산에 대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라.

셋째, 적극적 조세 및 예산정책으로 공공성과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

정부와 국회가 계엄과 탄핵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의 잊지 않았다면, 기만적인 부자감세를 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으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광장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1.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재명 정부의 조세정책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최고세율 인하(45%→25%)는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부자감세다.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주식배당을 받으려면 최소 6~7억원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해보면 가계 총자산의 약 2.6%가 주식에 투자된다. 6~7억 원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총자산은 최소 27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추정할 수 있다. 10%를 투자한다고 해도 그의 총자산은 60~70억 원에 이른다. 몇 십억 내지 몇 백억 자산가를 위한 감세, 부자감세 아니고 무언가?

반면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하위 80%의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받은 배당은 1인당 8만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감세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여 개미투자자에게도 '낙수효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67.5%를 가져간다. '낙수효과'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감추는 '위장효과'라 불려야 한다.

코스피 5000, 과연 누구를 위한 목표인가? 주가는 경제의 건강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재벌 대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시장에서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미투자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만큼 돈을 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불안정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비를 감당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상식이다. 코스피를 올리자고 세수를 포기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일은 결국 부자들의 자산을 불려주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다.

물가 폭등에 신음하는 서민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 영업적자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코스피 5000이 과연 민생 해결책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대를 위한 부자감세의 원상회복과 부유세를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손실되는 세수가 4,600억원이라고 한다. 소득에 제대로 과세해서 청년 일자리에, 자영업자 부채탕감에 사용하는 것이 조세국가의 원리 아닌가? 이재명 정부는 지금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거의 유일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모든 선진국은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것이 상식이다. 게다가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45%인데,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최고세율 25%는 또 어떤 논리인가?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철회,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이어지는 감세정책으로 주식시장을 조세회피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국회에 촉구한다. 윤석열 내란정부를 답습하고 있는 부자감세 정책, 친재벌 정책, 불평등 심화 정책을 중단하라. 부자들의 배를 불러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를 부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1. 17.

권영국 정의당 대표

2.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발언문] 불평등 심화하는 부자감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하고, 최고세율을 당초 검토하던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소득세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해 6%~45%의 소득세를 일괄 부과하고 있지만, 별도로 분리해 세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당초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던 배당소득 과세는 반토막이 난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운다. 코스피 주가 상승세를 타고 ‘주식투자자’들의 민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조세형평성도 국가재정 감소도 ‘나중’으로 미루는 잘못된 정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한 바 있다. 이는 ‘부자감세’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을 높인다는 사회적 반발을 유도한 결과였지만, 금투세 적용 대상인 연간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이상의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의 고소득자의 이해관계를 소액 ‘개미투자자’의 이해관계로 둔갑시키며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의 내란으로 인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보수양당’의 공생구조를 잘 보여준 사태라고 할 수 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기본사회’는 전국민이 ‘기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배당소득을 누리는 그런 사회인가. 만성적 저소득에 시달리면서 더 많이 일해야만 최소한의 생계를 누릴 수 있고, 힘들고 위험한 걸 알면서도 몸을 축내서 쿠팡 일을 하고, 주식투자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하는 다수의 보통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1% 고소득층 세금 깎아주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답하라. 이재명 정부는 국민안전 보장, 재생에너지 전환을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등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수많은 예산 사업을 공약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셈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슴이 미어진다며 사과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참사는 말뿐인 ‘산재근절’이 얼마나 공허한지 보여준다. 공기업인 발전소조차도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상시적, 만성적인 위험 속에 놓여있는 것을 잇다른 참사가 보여주고 있다. 일터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다단계 하청구조 전환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 위해서는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부쳐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예산이 어디서 나와야하겠는가. 개미투자자도 못되고 일개미같은 삶에 지쳐가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더 걷겠는가.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고소득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의가 핵심이다. 소득불평등을 그대로 두고서는, 고소득층엔 끊임없이 이윤을 쌓아주면서, 지구한계선을 넘는 ‘경제성장’에 끊임없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불평등 사회에서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에, 녹색당을 비롯한 진보3당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라
-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과세로 세수 확보하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라.

2025년 11월 17일

녹색당 공동대표 이상현

3.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

안녕하십니까. ‘금융과 미래’의 한영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재정상담을 합니다. 상담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월세를 내고, 밥값을 내고,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면서,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미래를 그려나갈 수 없다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절박하게 물어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 마주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무엇을 권유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더니, 이제는 자산 형성의 마지막 기회처럼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신용거래용자 잔고, 즉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규모는 26조 원에 육박하며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들은 벼랑 끝에서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 다수의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완전히 특정 계층만을 위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대한민국 성인의 60% 이상은 배당소득을 단 한 푼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시민들과 거의 무관한 소득입니다.

2023년 기준

* 상위 0.1%, 단 1만 7천 명이

* 13조 8,842억 원의 배당소득을 가져갔습니다.

*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무려 약 8억 원입니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바로 이 상위 0.1%, 극소수 고액 배당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노골적인 부자 감세입니다.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약 11조 원가까이 쌓여있는 학자금 부채에 짓눌려 사회를 시작하는 청년에게, 이 감세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역대 최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이 감세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부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청년의 학자금 부채부터 탕감 해야합니다. 재벌 배당 확대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회복부터 해야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조세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가계부채 2,000조 시대입니다. 국민에게는 빚을 강요하면서, 정작 부자들의 배당소득에 세금을 깎아주는 나라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 나라에 진짜 조세 정의를 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저희 '금융과 미래'는 이 땅의 모든 청년, 노동자, 자영업자가 빚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